

놀라운 적중률, 점수가 나오는 선행정학 모의고사

2024 김종규 선행정학

ALLPASS 모의고사

지방·서울 7급

문제편

PREFACE

2024 올패스 모의고사 선행정학 지방·서울 7급을 펴내며

2024 올패스 지방·서울 7급 동형모의고사는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개편되었습니다.

첫째, 최근 출제경향을 반영한 참신한 신경향 문제로 모의고사 1회분을 더 추가하여 모두 21회분의 동형모의고사가 수록되었습니다.

둘째, 최근 개정된 각종 개정법률(「정부조직법」, 「공무원노조법」, 「공공기관운영법」, 「지능정보화기본법」 등)은 물론, 지방자치 관련 법령(「지방자치법」, 「주민투표법」, 「주민조례발안법」 개정내용과 최근(2023.7.) 윤석열 정부의 지방분권정책방향과 추진체계 등을 완벽하게 반영하였으며, 최근 고난도 법령문제의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다양한 신경향 법령문제를 개발·수록 하였습니다.

셋째, 기존의 문제 중에서 시의성이 없거나 유사·중복된 문제를 일부 교체하였습니다.

넷째, 최근 개정법령이 많아 원칙적으로 모든 문제를 지방7급 시험일(2024.11.2.) 기준으로 편집·구성하였습니다.

다섯째, 수험생들의 요청으로 올해에는 강의(10.3. 개강예정)도 개설될 예정이니 강의를 수강하시면서 학습하신다면 효과를 배가시킬 수 있을 것입니다.

국가7급 동형모고문제와 90%는 중복되지 않으니 국가7급 동형모고를 기본으로 풀어보신 후 지방7급 동형으로 신경향 문제와 지방7급에 최적화된 문제들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학습하시면 마무리 효과가 한층 높아질 것입니다.

부디 이번 2024 지방·서울7급 동형모의고사 선행정학으로 막바지 더위를 잘 이겨내시고 다가오는 금년도 마지막 시험인 지방·서울7급 시험에서 좋은 결과 얻으시길 바랍니다. 무더운 여름 바쁜 가운데 교정에 힘써준 제자·조교들에게도 고마움을 전합니다.

* 참고로 해설편 별표(★) 개수는 난이도가 아닌 중요도 표시임을 알려드립니다.

2024. 08. 22.
카스파 연구실에서 저자

김중규

CONTENTS

PART 문제

제01회 모의고사	10	제16회 모의고사	100
제02회 모의고사	16	제17회 모의고사	106
제03회 모의고사	22	제18회 모의고사	112
제04회 모의고사	28	제19회 모의고사	118
제05회 모의고사	34	제20회 모의고사	124
제06회 모의고사	40	제21회 모의고사	130
제07회 모의고사	46		
제08회 모의고사	52		
제09회 모의고사	58		
제10회 모의고사	64		
제11회 모의고사	70		
제12회 모의고사	76		
제13회 모의고사	82		
제14회 모의고사	88		
제15회 모의고사	94		

2024년 11월 2일 시행

공무원 공개경쟁채용 필기시험

행정학

응시번호	
성명	

문제책형
가

【시험과목】

제1과목	국어	제2과목	헌법
제3과목	행정법	제4과목	행정학
제5과목	선택(1) : 경제학원론, 지방자치론, 지역개발론 중 1과목 선택		

응시자 주의사항

- 시험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나 시험종료 후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를 한 사람은 「공무원임용시험령」 제51조에 의거 부정행위자로 처리됩니다.
 - 답안지 책형 표기는 시험시작 전 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문제책 앞면에 인쇄된 책형을 확인한 후, 답안지 책형란의 해당 책형(1개)에 "●"와 같이 표기하여야 합니다.
 - 답안은 반드시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에 맞추어 표기하여야 하며, 과목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문제책 표지의 과목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특히, 선택과목의 경우 원서접수 시 선택한 과목이 아닌 다른 과목을 선택하여 답안을 표기하거나, 선택 과목 순서를 바꾸어 표기한 경우에도 응시표에 기재된 선택과목 순서대로 채점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이 시작되면 문제를 주의 깊게 읽은 후, 문항의 취지에 가장 적합한 하나의 정답을 고르며, 문제내용에 관한 질문은 하실 수 없습니다.
 - 답안을 잘못 표기하였을 경우에는 답안지를 교체하여 작성하거나 수정테이프만을 사용하여 수정할 수 있으며(수정액 또는 수정스티커 등은 사용 불가), 부착된 수정테이프가 떨어지지 않도록 눌러주어야 합니다.
- 불량 수정테이프의 사용과 불완전한 수정처리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문제는 응시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응시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 문제책은 시험종료 후 가지고 갈 수 있습니다.

제1회 모의고사

01 정책변동 이론 중 정책지지(옹호)연합모형의 내용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 가. 다양한 활동 행위자를 포함한 정책 하위 체제에 중점을 둔다.
- 나. 정책변동과 그 안에서 작용하는 정책 지향적 학습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10년 이상의 시계가 필요하다.
- 다. 정책을 어떻게 실현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 우선순위 및 인과관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라. 정책의 신념체계를 규범적 핵심 신념, 정책 핵심 신념, 부차적 신념의 세 겹 계층구조로 설명할 수 있다.

- ① 가, 나 ② 가, 나, 다
- ③ 가, 나, 라 ④ 가, 나, 다, 라

02 조직진단모형의 하나로 반 데 벤과 페리(Van De Ven & Ferry)가 제시한 조직평가지표(OAI : organization assessment instru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OAI는 폐쇄체제를 전제로 한다.
- ② OAI는 조직을 조직 전체, 부서와 작업집단, 개인 간 관계의 세 단계로 구분하여 진단한다.
- ③ 조직부서설계 차원은 조직 내 부서와 작업집단의 업무, 구조 및 과정 등을 측정한다.
- ④ 업무설계 차원은 조직 내 부서 간의 상호의존도, 조정 그리고 통제의 구조를 측정한다.

03 주민자치와 단체자치 특징의 차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주민자치는 정치적 의미이고, 단체자치는 법률적 의미이다.
- ② 주민자치에서는 고유권설을 인정하는 데 비해, 단체자치는 수탁권설의 견해를 인정한다.
- ③ 주민자치는 민주주의 원리이고, 단체자치는 지방분권의 원리이다.
- ④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대륙형 모델이고,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정부가 사무를 처리하는 영국형 모델이다.

04 외부효과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 ① 긍정적 외부효과는 사회적 적정수준보다 과잉생산의 결과를 가져온다.
- ② 불법주차, 환경오염 등은 부정적 외부효과를 야기시키는 행위이다.
- ③ 외부효과란 시장을 거치지 않고 제3자에게 이익을 주거나 비용을 부담시키는 행위이다.
- ④ 부정적 외부효과를 해결하기 위해 조세를 부과할 수도 있다.

제14회 모의고사

01 행정학의 여러 가지 접근법에 대한 평가 중 옳바르지 않은 것은?

- ① 공공선택론은 인간의 가치나 개인의 자유에 의한 경제적 선택만을 중시한 나머지 행정의 대응성을 저하시킬 수 있다는 비판을 받는다.
- ② 체제론은 행정의 종속변수적 측면을 중시하고 미시적인 문제나 가치문제는 다루지 못한다.
- ③ 신공공서비스론은 새로운 규범적 가치의 구현을 위한 구체적인 처방이나 수단적, 기술적 전문성을 소홀히 한다.
- ④ 거버넌스이론은 너무 많은 변수를 결합시키고 있어 모형화가 어렵고 모든 사람의 참여는 모든 사람의 무책임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

02 행정재정립운동(refounding movement)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 ① 직업공무원의 재량권을 축소하고 정치적으로 임명하는 공무원의 수를 상대적으로 증가시키는 것이다.
- ② 기존의 정치행정이원론을 재해석하여 정책과정에서 공무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옹호하였다.
- ③ 정부를 재구축하고 민간부분이 공공서비스 공급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④ 고객중심적 행정을 주요 대상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경향이다.

03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상 고위공무원단 인사 운영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 ① 고위공무원단 인사관리대상의 범위에는 휴직 중이거나 직위해제 중인 사람은 포함되지 아니한다.
- ② 대통령은 일반직 공무원의 신규채용, 고위공무원단 직위로의 승진임용 등에 대한 임용권 등을 제외한 임용권을 소속장관에게 위임한다.
- ③ 고위공무원단 후보자에 대한 역량평가는 4명 이상의 역량평가위원이 참여하여 평가한다.
- ④ 고위공무원을 강임할 때에는 3급공무원으로 임용하여 고위공무원단 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하여야 한다.

04 「지방교부세법」과 「동법 시행령」상 지방교부세의 교부기준과 대상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사실과 다른 것은?

- ① 보통교부세는 해마다 기준재정수입액이 기준재정수요액에 못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에 그 미달액을 기초로 교부한다.
- ② 기초자치단체 중 자치구는 보통교부세를 직접 교부받지 못하고 그 특별시 또는 광역시에 교부한다.
- ③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는 부동산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다.
- ④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는 소방안전교부세를 교부받지 못한다.

제1회 정답 및 해설

01	④	02	③	03	④	04	①	05	③
06	④	07	④	08	①	09	④	10	②
11	④	12	④	13	②	14	④	15	②
16	①	17	③	18	②	19	③	20	④

01

2024 선행정학 p.190 ④

★★

가, 나, 다, 라 모두 맞다.

- 가 [o] 다양한 활동행위자로 구성된 정책지지원합들을 포함한 정책하위체제에 연구의 중점을 둔다.
- 나 [o] 정책지지원합들간 갈등과 대립으로 정책이 10년 이상의 장기간에 걸쳐 변동되고 학습되는 과정을 중시한다.
- 다 [o]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에서 정책변동요인과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정책을 어떻게 집행할 것인가에 관한 가치 우선순위 및 인과관계의 과정을 설명할 수 있다.
- 라 [o] 정책의 신념체계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정착응호연합모형의 분석적 틀

정책하위체제	신념체계를 달리하는 복수의 대립적인 정착응호연합(찬성연합과 반대연합 등)들로 구성된 정책집행환경	
정착응호연합	정책핵심신념을 같이(공유)하는 행위자들로 구성 ¹⁾	
신념체계	기본핵심신념, 정책핵심신념, 부차적 신념 (기본핵심신념, 정책핵심신념은 쉽게 변하지 않으나 부차적 신념은 쉽게 바뀜)	
정책중개자	정책연합간 갈등을 조율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중재자	
정책변수	안정적 변수	하향적 모형에서 도출된 변수 (문제영역의 속성, 사회구조 등)
	역동적 변수	외부적 변수, 장기간(10년) 영향 (사회경제조건이나 여론의 변화 등)
	매개변수	장기적 연합 기회구조 (정치체제의 개방성 등)
정책변동의 핵심경로 ²⁾	외부적 충격	정책하위체제 밖의 동태적인 사건
	내부의 사건	정책하위체제 내의 충격과 사건
	정책지향적 학습	정착연합의 신념체계가 장기간(10년)에 걸쳐 수정되는 과정
	교섭된 합	정착반연합들간 합의 도달

- 1) 정착응호연합은 입법부 의원 + 관료 + 이익집단 등 철의 삼각 구성원뿐 아니라 과학기술정보를 가진 전문가들로 구성
- 2) 신념체계 및 정책의 변동에 영향을 주는 요인

정책지지원합모형의 신념체계

규범적 핵심 신념	모든 정책에 적용되는 근본 가치로서 쉽게 변동되지 않음
정책핵심 신념	규범적 핵심을 달성하기 위한 기본전략
부차적 신념	특정 정책에 대한 행정규칙, 예산배분, 규정해석 등으로 쉽게 변동되는 이차적 신념

02

③

★

조직부서(직무부서) 설계차원은 조직 내 부서와 작업집단의 업무, 구조 및 과정 등을 측정한다. Van de Ven & Ferry(1980)의 조직진단을 위한 조직 평가지표(OAI : organization assessment instrument)에 따르면 조직의 특성은 환경(맥락), 설계(디자인), 성과라는 세 가지 속성의 분석적 틀이 필요하다. 환경(맥락) 속성은 조직영역으로, 설계(디자인)는 관리강도로, 성과는 효율성으로 측정할 수 있다. 이런 3가지 속성은 다음 네 가지 단계로 진단·분석된다. 즉, ① 조직전체 ② 작업집단과 부서 ③ 개인적 업무 그리고 ④ 직무부서 간 관계이다. 그리고 위 네 단계의 진단은 다섯가지 서로 다른 차원(성취도, 거시조직, 조직부서, 업무설계, 부서간)에서 분석된다.

- ① [X] 조직특성은 환경(맥락), 설계(디자인), 성과라는 세 가지 속성으로 측정된다. 따라서 개방체제적 관점을 전제로 한다. OAI 분석틀을 위한 기본적인 정의(가정)는 구조와 과정에서 많은 다른 형태로 구성된 개방사회 행동체제라는 것에 있다.
- ② [X] OAI에서는 조직을 네 가지 단계로 분석한다. 즉, 조직 전체, 작업집단과 부서, 개인적(부서) 업무, 그리고 개인 간(부서간) 관계이다.
- ④ [X] 조직 내 부서 간의 상호의존도, 조정, 그리고 통제의 구조를 측정하는 것은 직무(업무) 설계차원이 아니라 직무부서 간 관계이다.

조직평가지표(OAI)의 4단계 진단 관점

조직전체	조직전체의 목표나 임무, 비전, 환경 적응
작업집단과 부서	조직 내 부서와 작업집단의 업무, 구조 및 과정 등
직무자체(개인업무)	직무의 특성, 난이도, 관리강도 등
직무부서간 관계	조직 내 부서 간의 상호의존도, 조정, 통제구조 등

조직평가지표(OAI)의 단계별 5가지 분석차원

성취도차원	조직내 기록으로 전체조직과 부서 및 업무의 효과성 측정
거시조직차원	OAI에 의해 전반적인 조직구조, 역사 및 운영규모 및 영향 측정
조직부서차원	OAI와 조직내 기록으로 조직내 부서와 작업 집단의 업무, 구조 및 과정의 다양한 성격 측정
업무설계차원	OAI로 개인적 업무·지위의 구성방법, 직원들의 배경, 기술적 요구사항, 직원들의 반응 등 측정
부서간차원	OAI로 조직부서 및 지위간의 상호의존도, 조정, 조화 및 통제의 구조 측정

03

2024 선행정학 p.762 ④

★★

주민자치는 지역의 문제를 지역 주민이 자신의 책임 아래 처리하는 **영미형 주민자치 모델**이고, 단체자치는 국가로부터 상대적으로 독립한 지방정부가 사무를 처리하는 **대륙형 단체자치 모델**이다.

- ①②③ [o] 모두 주민자치와 단체자치의 특성에 대한 맞는 설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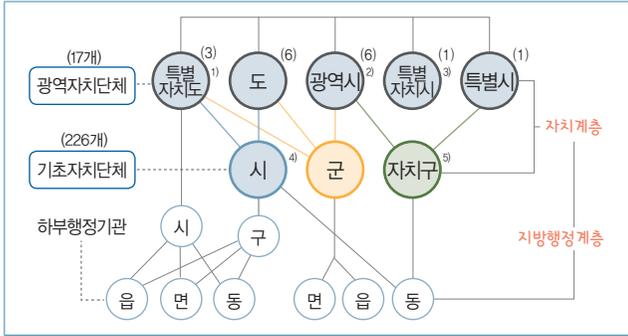
지방자치의 계보

구분	단체자치	주민자치
의미(본질)	법률적 의미(지방분권)	정치적 의미(민주주의, 주민참여)
국가	독일·프랑스·일본 등 대륙계 국가	영국·미국 등 영미계 국가
자치권의 인식	국가에서 전래된 권리(전래권설)	자연적·천부적 권리(고유권설)
자치의 중점	중앙과 지방과의 관계, 형식적·법제적 자치(자치단체에 의한 행정), 대외적 자치	지방정부와 주민과의 관계, 내용적·본질적 자치(주민에 의한 행정), 대내적 자치
사무의 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의 구분	고유사무와 위임사무 구분 없음 (위임사무 부존제)
권한부여방식	포괄적 수권(예시)주의	개별적 수권(지정)주의
중앙통제	강함(행정적 통제)	약함(입법적·사법적 통제 위주)
조세제도	부가세(국가가 과세주체)	독립세(자치단체가 과세주체)

법)에 의하여 두지 않고 있으나 강원특별자치도(2023.6.11.)와 전북특별자치도(2024.1.18.)에는 두게 된다.

- ☑ ① [X] 지방의원 정수의 1/2 범위에서 조례로 지방의원에 대한 정책지원 전문인력을 둘 수 있다.
- ② [X] 자치단체장 선임방법 등을 포함한 지방의회 및 집행기관의 구성형태를 주민투표를 거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자치단체마다 달리 할 수 있다.
- ③ [X] 종래에는 자치단체장은 조례가 위임한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었으나, 「지방자치법」 개정(2022.1.13.시행)으로 현재는 **조례의 위임 없이도** 조례의 범위에서 규칙을 제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한국의 지방자치행정 계층구조(2024.9.1. 기준)



- 1) 특별자치도에는 시·군을 두도록 하되,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군을 두지 않을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 개정(2023.6.7. 시행) ⇒ 강원·전북 O, 제주 X
- 2) 광역시 요건은 법정화되어있지 않음(인구 100만 X)
→ 특별자치시에 기초단체를 두도록 하던 「지방자치법」 상 규정 삭제(2022.1.13.시행)
- 3) 특별자치시에는 기초자치단체가 없음
→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 제외
- 4) 인구 50만 이상의 시에는 자치구가 아닌 구를 둘 수 있으며, 인구 100만 이상의 대도시(특례시)에 법률이 정하는 바에 따라 특례 인정 가능(2022.1.13. 시행)
→ 부시장 2인 등 → 시·군세
- 5) 자치구는 시·군보다 자치권이 좁고, 세목의 수도 작음(2개 : 5개)
→ 자치구세

11 2024 선행정학 p.34 ④

연계기업이란 사회적기업에 대하여 재정지원 등 다양한 지원을 하는 후원기업으로 사회적 기업을 다양하게 지원은 하지만 인적·물적·법적으로 독립되어 있는 자로서 사회적 기업의 근로자에 대하여 고용상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법 제 2 조 및 제15조).

- ☑ ① [X] 사회적 기업은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에는 이윤의 2/3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법 제8조).
- ② [X] 고용노동부장관은 사회적 기업의 활동실태를 5년마다 조사하고 그 육성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법 제5조 및 제6조).
- ③ [X] 사회적 기업은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활동 등 영업활동을 하여야 한다(법 제8조).

12 2024 선행정학 p.81 ①

자치단체의 장은 출납 폐쇄 후 80일 이내에 결산서를 작성하고, 지방의회가 선임한 감사위원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 ② [X]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10

일 전까지 예산안을 의결하여야 한다.

- ③ [X] 지방의회에서 폐지·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이 불가능하다.
- ④ [X] 자치단체 장은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한다.

☑ 지방재정의 운영 - 지방자치단체의 예산과 결산(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방회계법)

(1) 회계의 구분

- ①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
- ② 특별회계는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

(2) 예산의 편성 및 의결

- ①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시·도는 회계연도 시작 50일 전, 시·군 및 자치구는 40일 전까지 지방의회에 제출
- ② 시·도의회는 회계연도 시작 15일 전까지, 시·군 및 자치구의회는 10일 전까지 의결
- ③ 지방의회는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 지출예산의 금액을 증가 또는 새로운 비용항목 설치 불가
- ④ 자치단체의 장은 예산안 제출한 후 내용의 일부를 수정하려면 수정예산안을 제출할 수 있음.
- ⑤ 예산의 이송·고시 : 지방의회 의장은 예산안이 의결되면 3일 이내에 자치단체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고 자치단체장은 이송받으면 지체 없이 시·도에서는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시·군 및 자치구에서는 시·도지사에게 보고하고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만, 재의요구시에는 그러하지 아니함).
- ⑥ 성인지 예산서 : 자치단체 장은 성인지 예산서를 작성, 예산안에 첨부하여야 함.
- ⑦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 자치단체 장은 예산 편성시 중기지방재정계획과 투자심사 결과를 기초해야 함.
- 중기지방재정계획 : 자치단체의 장은 매년 5회계연도 이상의 기간에 대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하여 예산안과 함께 지방의회에 제출하고,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
- 투자심사 : 자치단체의 장은 주요 사업에 대해서 미리 투자심사를 하거나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시·도지사에게 의뢰하여야 함.
- ⑧ 타당성 조사 : 자치단체 장은 투자심사 대상 중에서 총사업비 500억원 이상인 신규사업에 대해서는 투자심사 전에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전문기관에 의뢰하여 그 사업의 타당성을 조사하여야 함.
- ⑨ 예산의 내용(예산의 형식) : 예산은 예산총칙, 세입·세출예산, 계속비, 채무부담행위 및 명시이월비를 총칭
- ⑩ 예산 과목 : 세입예산은 성질과 기능을 고려하여 장·관·항으로, 세출예산은 기능·사업 또는 성질별로 주요항목 및 세부항목으로 구분하고 주요항목은 분야·부문·정책사업으로, 세부항목은 단위사업·세부사업·목으로 구분
- ⑪ 예산총계주의 : 한 회계연도의 모든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모든 지출을 세출로 함. 세입과 세출은 모두 예산에 편입하여야 함. 다만 현물출자 기금 등은 세입·세출예산 외로 처리 가능

(3) 예산의 집행

- ① 계속비 : 자치단체의 장은 한 회계연도를 넘어 계속하여 경비를 지출할 필요가 있으면 그 총액과 연도별 금액을 정하여 계속비로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계속비로 지출할 수 있는 연한은 그 회계연도부터 5년 이내이며, 필요시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연한 연장 가능
- ② 예비비 : 자치단체는 예산 외 지출이나 초과지출에 충당하기 위하여 세입·세출예산에 예비비를 계상하여야 하며, 예비비의 지출은 다음 해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함.
- 일반회계와 교육비특별회계의 경우에는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계상하여야 하고, 특별회계는 총액의 100분의 1 이내의 금액을 예비비로 예산에 계상할 수 있음.
- 재해·재난 관련 목적예비비는 별도로 계상 가능. 지방의회에서 폐지·감액된 항목에 대해서는 예비비 사용 불가
- ③ 추가경정예산 : 자치단체의 장은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으면 추가경정 예산안을 편성하여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 함. 다음 경비는 추가경정예산의 성립 전에 사용할 수 있음.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용도가 지정되고 소요잔액이 교부된 경비
- 국가 또는 시·도로부터 재난구호 및 복구와 관련하여 복구계획이 확정·통보된 소요 경비

제3회 정답 및 해설

01	③	02	④	03	②	04	①	05	④
06	④	07	②	08	②	09	②	10	①
11	①	12	②	13	①	14	②	15	③
16	④	17	④	18	③	19	①	20	③

01

2024 선행정학 p.333 ③

★★★

브룸(V.Vroom)의 기대이론에 따르면 어떤 특정한 수준의 성과를 달성했을 때 바람직한 보상이 이루어지리라고 개인이 믿는 정도는 **수단성(instrumentality)**이라고 한다.

- ☑ ① [○] Maslow의 욕구계층이론은 어느 정도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욕구로 나아간다는 만족진행모형이고, 자아실현욕구를 제외한 하위욕구들은 충족되었을 때 사라지는 결핍의 욕구이다.
- ② [○] Herzberg의 욕구충족이론에 따르면 동기요인은 사람과 직무와의 관계에 대한 것으로, 만족을 주는 요인이다. 만족의 역이 불만이 아니므로 동기요인이 없어도 구성원은 불만을 느끼지는 않는다.
- ④ [○] Adams의 형평성이론에 따르면 개인은 준거인과 비교해 자신의 노력과 그 산출간 비율의 불일치(보상의 불공평성)를 지각하면 이를 제거하는 방향으로 동기가 부여된다.

V.Vroom의 동기기대이론(MIE이론)

- ① 기대감(E) - 노력·능력을 투입하면 성과가 있을 것이라는 주관적인 기대감
- ② 수단성(I) - 성과(차 산출)가 바람직한 보상(2차 산출·결과)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믿는 주관적인 정도
- ③ 유의성(V) - 보상(2차 산출이나 결과)의 중요성에 대한 주관적인 선호의 강도

0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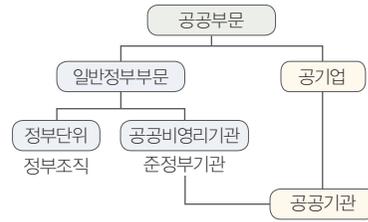
2024 선행정학 p.407 ④

★★

공기업이 아니라 정부기관과 준정부기관을 합쳐서 **일반정부부문**이라고 한다. **공기업은 제도적으로 일반정부부문에서 제외된다.** 준정부기관은 실질적으로 정부가 수행해야 할 업무를 대신 위탁 받아 처리하는 공공비영리기관이므로 정부조직과 제도적 성격이 같다고 본다.

- ☑ ① [○] 공기업은 생산비용의 50% 이상을 자체적인 매출수입으로 충당할 수 있는 기업적 성격이 강한 공공기관을 말한다.
- ② [○] 준정부기관은 정부의 기능을 대신 위탁받아 처리하는 기관으로 제도적으로는 일반정부부문에 해당한다. 따라서 기업성보다 공공성이 강하다는 점에서 공기업과 제도적 성격이 근본적으로 다르다.
- ③ [○] 준정부기관은 공공비영리기관으로 정부의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기 때문에 정부에 의한 통제가능성이 매우 높다. 따라서 제도적으로 일반정부부문에 포함된다.

공공부문의 구성



03

2024 선행정학 p.59 ②

★★

국가 또는 자치단체가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기 위한 법률, 대통령령은 물론, 총리령이나 부령 등도 입법추진하고자 하는 때에는 **규제개혁위원회의 규제심사**를 받아야 한다.

- ☑ ① [○] 규제심사는 정부입법 과정에서 필수적으로 거쳐야 하는 의무적 절차이다.
- ③ [○] 규제심사는 정부입법사항에만 적용이 되고 의원입법사항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따라서 의원입법 사항은 규제심사에서 사각지대로 남아있다는 점이 문제이다.
- ④ [○] 규제심사기준과 착안점에 대한 설명으로 맞는 지문이다.

04

2024 선행정학 p.608 ①

★★

재정이 국민경제 전반에 미치는 영향은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을 모두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건전성은 관리재정수지를 기준으로 각각 판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관리재정수지는 통합재정수지에서 사회보장성기금(적립성, 보험성기금)을 차감한 개념으로 통합재정수지보다 더 엄격하고 정확한 재정건전성 평가지표이다. 사회보장성기금은 미래 유사시에 지급해야 하는 수입금이 대개 포함되어 있기 때문이다.

- ☑ ② [×] 2001 IMF 재정통계편람(GFSM)에 따라 통합재정 포함범위가 회계단위에서 제도단위로 변경됨에 따라 과거에 포함되지 않았던 금융성기금과 공공비영리기관(준정부기관)도 현재는 **통합재정에 포함되고 있다.**
- ③ [×] **반대이다.** 조세지출예산서의 작성의무는 조세특례제한법에, 조세지출예산서의 국회제출의무는 국가재정법에 각각 규정되어있다.
- ④ [×] **반대이다.** 일반회계는 통합예산(unified budget)이나 예산단일성 원칙의 산물이고, 반대로 특별회계나 기금은 예산단일성 원칙의 예외로서 복합예산(multiple budget)의 산물이다. 통합예산(unified budget)이란 모든 정부예산은 하나로 통합되어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고, 반대로 복합예산(multiple budget)은 회계의 특성과 다양성을 고려할 때 정부예산은 복수가 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05

2024 선행정학 p.65 ④

★★

지대(rent)란 정부규제가 독점상태를 만들어주게 되고 그로 인하여 발생하는 인위적이고 반사적(독점적) 이득을 말하는 것으로 지대추구행위란 기업들이 이러한 지대를 추구하고 로비활동 등 비생산적인 활동을 하게 되는 것으로 이는 규제의 부작용 또는 규제실패, 즉 **정부실패요인**에 해당한다.

- ☑ ① [○] 정부실패는 시장실패보다 대응하기가 힘든 구조적이고 보편적인 현상이다. 무형성이나 경쟁의 결여 등 공공재나 공공부문이 지닌 구조적인 특징으로 인하여 발생하기 때문이다.

- ② [○] 정부내부의 비공식목표(사적 목표)가 공식목표(공적 목표)를 대체하는 내부성(사적 목표의 설정)에 의해서도 정부실패는 발생할 수 있다.
- ③ [○] 경쟁의 결여 등 정부내부적인 이유로 인하여 산출량이 생산가능성곡선에 충분히 도달하지 못하여 발생하는 비효율을 의미하는 X의 비효율에 의해서도 정부실패는 발생한다.

시각실패의 원인과 대응

시장-자정공불소규의

원인 \ 대응방식	공적공급 (조직)	공적유도 (유인)	공적규제 (권위)
공공재의 존재	○	→ 긍정적	→ 부정적
외부효과 발생		○	○
자연독점	○		○
불완전경쟁			○
정보의 비대칭성		○	○

* 시장실패의 원인에는 위 5가지 외에 과도한 규모의 경제, 불공평한 소득분배가 포함된다.

정부실패의 원인과 대응

원인 \ 대응	민영화	정부보조 삭감	규제 완화
사적목표 설정	○		
X-비효율	○	○	○
파생적 외부효과		○	○
권력의 편재	○		○

* 정부실패의 원인에는 위 4가지 외에 비용과 수익의 절연이 포함된다.

06

2024 선행정책 p.817 ④

★★

과거 「지방자치분권 및 지방행정체제개편에 관한 특별법」에 명시되었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배분의 원칙을 2022년 전면 개정되어 시행 중인 「지방자치법」에는 새롭게 명시하였다(제11조). 즉, 시·도와 시·군 및 자치구의 사무를 처리할 때 서로 겹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하며(비경합의 원칙) 사무가 서로 겹치면 시·도가 아닌 시·군 및 자치구가 먼저 처리한다(보충성의 원칙)고 규정하고 있다.

- ☑ ① [○]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업무는 자치단체의 사무이다.
- ② [○] 하위자치단체의 사무 및 조례는 상위자치단체 조례를 위반할 수 없다.
- ③ [○] 국가 차원에서 통일적으로 처리해야 하는 국가사무는 법률상 위임규정 등이 없다면 자치단체가 처리할 수 없다.

국가사무와 자치단체의 사무 구분(지방자치법 제13조 & 15조)

국가사무	자치단체의 사무
① 외교, 국방, 사법, 국제 등 국가의 존립에 필요한 사무	①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및 행정관리 등에 관한 사무
② 불가정적, 금융정책, 수출입정책 등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사무	② 주민의 복지증진에 관한 사무
③ 농림, 축·수산물 및 양곡의 수급 조절과 수출입 등 전국적통일이 필요한 사무	③ 농림·수산·상공업 등 산업증진에 관한 사무
④ 국가종합 경제개발계획, 직할하천, 국유림, 국토종합개발계획, 지정항만, 고속도로, 일 반국도, 국립공원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④ 지역개발, 자연환경 보전 및 생활환경시설의 설치·관리에 관한 사무
⑤ 근로 기준, 측량 단위 등 전국적 기준의 통일 및 조정을 필요로 하는 사무	⑤ 교육·체육·문화·예술의 진흥에 관한 사무
⑥ 우편·철도 등 전국적 규모의 사무	⑥ 지역민방위 및 지방소방에 관한 사무
⑦ 고도의 기술이 필요한 검사·시험 연구, 항공관리, 기상행정, 원자력 개발	⑦ 국제협력과 교류사무

자치단체 종류별 사무 구분(지방자치법 제14조)

시·도와 시·군·구의 공통사무	① 자치단체의 구역, 조직, 행정관리 등 사무(조례·규칙의 제·개정, 산하행정기관의 조직관리, 소속 공무원의 인사, 지방세 부과 및 징수, 예산의 편성·관리, 주민등록 관리 등)
------------------	---

시·도사무	① 처리결과가 둘 이상 시·군·구에 미치는 광역사무 ② 시·도 단위로 동일한 기준으로 처리해야 할 사무 ③ 시·도 단위로 통일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는 사무 ④ 국가와 시·군·구 사이의 연락·조정 등의 사무 ⑤ 시·군·구가 독자적으로 처리하기 어려운 사무 ⑥ 둘 이상의 시·군·구가 공동으로 설치하는 시설의 설치 및 관리
시·군·구사무	① 시·도사무를 제외한 사무 ② 인구 50만 이상의 시는 도의 사무 일부를 직접 처리할 수 있음 ③ 시·도와 시·군·구간 구체적인 종류별 사무는 대통령령으로 정함 ④ 시·도와 시·군·구 사무는 서로 겹치지 않도록 해야하며, 겹치면 시·군·구가 먼저 처리

07

2024 선행정책 p.409 ②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3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총수입액 중 자체수입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기관은 공기업으로 지정하고, 공기업이 아닌 공공기관은 준정부기관으로 지정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대통령령인 동법 시행령(제7조)에서는 자체수입 비중이 50% 이상인 기관을 공기업으로 지정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 ① [×] 2024.9.1. 현재,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의 지정기준은 대통령령상 직원 정원 300명, 총수입액 200억원, 자산규모 30억원 이상이다.
- ③ [×] 「공공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 제2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장관은 구성원 간의 상호부조, 권익증진, 복리증진, 권익향상을 목적으로 설립된 기관, 지방자치단체가 설립하고 운영에 관여하는 기관, 「방송법」에 따른 한국방송공사와 「한국교육방송공사법」에 따른 한국교육방송공사는 공공기관으로 지정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 ④ [×] 기획재정부장관은, 기타공공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기관의 성격 및 업무 특성을 고려하여 기타공공기관 중 일부를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 등으로 세분하여 지정할 수 있다(「공공기관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 제5항).

공공기관의 유형과 지정기준

공준기-시준-기위



1) 2023.1.1. 부터는 직원정원, 수입액 및 자산규모가 일정기준 이상에 해당하는 공공기관 중에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이 지정된다. (정수자-323) 기획재정부장관이 매년 지정·고시

08

2024 선행정책 p.615 ②

★★

주의하여야 한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상 자연재난과 사회재난에 따른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 편성사유가 아니다.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가 발생한 경우에만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즉, 전쟁이나 대규모 재해의 경우 확실히 발생한 경우에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가 되나, 그 발생 우려만으로는 추가경정예산안의 편성 사유가 될 수 없다. 다만, 「국가재정법」과 달리 「지방재정법」에는 추가경정예산의 편성 사유가 특정되어 있지 않으며, 일부 경비는 성립 전에 사용할 수도 있다. (재해복구경비 등)

★★

전통적 시장실패론에서는, 외부효과 즉 제3자에게 부정적, 긍정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것이 시장실패의 핵심적인 요인으로 정의되고 있지만, 네티이론이 기 반을 두고 있는 행동경제학에서는 휴리스틱과 행동 편향에 따른 영향이 개인의 의사결정과 선택에 영향을 미쳐, 자신의 후생 손실을 초래하는 내부효과가 행동 적 시장실패의 핵심 요소이다.

- ☑ ② [○] 네티이론은 설정된 기본값(디폴트 옵션)을 그대로 따르려는 행동편향 을 이용한 전략적 정책설계를 중시하는 이론으로, 사람들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 ③ [○] 네티이론에서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더 나은 결정을 도와주는 주체로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촉매적 정책 수단으로서 정부개입을 이용한다. 즉 도덕적 설득, 경제적 유인, 강압 적 규제는 구성원들의 행동을 변화시킬 정부 개입이 될 수 없다.
- ④ [○] 네티지는 실험과 검증을 중시하는 행동경제학에 기반하므로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한 정책 결정을 중시한다.

네티이론의 핵심

- ① 정부는 사람들의 선택의 자유를 존중하면서 보다 나은 의사결정을 하도록 도와준다.
- ② 네티지는 선택(옵션)설계에 의한 간접적이고 유도적인 방식의 정부개입방식으로서 촉 매적 정책수단의 성격이 띤다.
- ③ 각종 실험 등에 의하여 엄격하게 검증된 증거에 기반하여 정책을 선택하거나 결정 하는 것을 강조한다.
- ④ 행동적 시장실패를 해결하기 위한 정부개입은 급진적 점증주의 관점에 기초하고 있 다.
- ⑤ 외부효과에 의한 전통적 시장실패론과 달리, 내부효과(인지오류나 행동편향)에 의한 행동적 시장실패 중시

신공공관리론과 네티이론의 비교

구분	신공공관리론	네티이론
이론적 토대	신고전파 경제학, 공공선택론	행동경제학
합리성	완전한(경제적) 합리성	제한된 합리성
정부역할이론	신자유주의, 시장주의	자유주의적 개입주의
정부역할의 근거와 한계	시장실패와 제도실패, 정부실패	행동적 시장실패 ¹⁾ , 정부실패
공무원상	정치적 기업가	선택(옵션)설계자
정부정책목표	고객주의, 개인이익 증진	행동변화를 통한 삶의 질 제고
정책수단	경제적 인센티브	네티 ²⁾ (선택설계)
정부개혁모델	기업가적 정부	네티정부

- 1) 행동적 시장실패란 불확실한 상황에서 휴리스틱(시행착오)을 활용한 인간의 의사결정과정에서는 인지적 오류와 행동편향이 발생할 수 있는데 이로 인하여 개인의 합리적 의사결정이 방해받 게되어 중대한 피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행동경제학에서는 행동적 시장실패라고 정의한다. 자기 자신의 내부적 원인(행동편향 등 내부효과)에 의하여 발생하는 시장실패라는 점에서 외부효과 등 에 의한 전통적 시장실패론과는 다르다.
- 2) 네티란 어떤 선택을 금지(정부규제 등)하거나 강요(경제적 유인 등)하지 않으면서 예측가능한 방 향으로 개인의 행동을 변화시키는 선택설계의 제반요소나 정책수단을 말한다. 즉 네티지는 직접적 인 명령이나 지시, 경제적 유인이나 제재를 가하지 않으면서 사람들의 바람직한 행동을 유도하 는 수단이다.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제2항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특별교부세는 보통교부세와 달리 그 사용에 관하여 조건을 붙이거나 용도를 제한할 수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 ☑ ① [○] 지방교부세의 종류에 해당하는 설명으로 옳은 지문이다.
- ② [○] 보통교부세는 재정력지수를 기준으로 하여 교부한다. 다만 자치구는

보통교부세의 직접적 교부주체가 아니라 상위 자치단체를 통해 보통 교부세를 교부받는다.

- ④ [○]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규정된 내용으로 맞는 지문이 다. 특별교부세는 신청에 의한 교부가 원칙이지만 신청없이 직권으로 도 교부할 수 있다.

지방교부세의 종류

보통안부

종류	개념	재원	용도
보통 교부세	재정력지수(기준재정수입액/기준재정수 요액)가 1 이하인 자치단체에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97	일반 재원
특별 교부세	① 기준재정수요액으로는 산정할 수 없는 특별한 재정 수요 발생 시 교부 ② 재난 복구 및 안전관리 를 위한 특별한 재정수 요 발생 시 교부 ③ 국가적 장려, 국가와 지 방 간 시급한 협력, 역 점시책, 재정운용 실적 우수 시 등 교부	[내국세총액의 19.24% + 정산액]의 100분의 3 조건이나 용도제한 가능	특정 재원
소방안전 교부세	소방인력 운용, 소방 및 안전시설 확충, 안전관리 강화 등을 위하여 교부	담배에 부과되는 개별소비세 총 액의 100분의 45 + 정산액	특정 재원
부동산 교부세	재정여건 및 지방세 운영상황 등을 고 려하여 교부	총부세 전액 + 정산액	일반 재원

TEST STATS

	9급	7급
난이도	상 중 하	상 중 하
예상 평균점수	58.2점	60.9점
상위 20% 예상점수	72.5점	75.4점

대 / 한 / 민 / 국 / 대 / 표 / 행 / 정 / 학

행정학의 선을 또한번 새롭게 굿다

고객 HOT LINE

온라인 강의 gong.conects.com
www.kaspa.co.kr TEL. 02-532-5280~1

오프라인 강의 공단기고시학원 TEL. 02-812-6521

펴낸날 2024년 8월 30일
펴낸이 김중규
펴낸곳 (주)카스파
주소 서울시 서초구 동광로39길 46(반포동) 해나하우스 B동 601호
도서문의 TEL. 02-532-5314
등록번호 제2015-000214호

